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 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김혜정*

| 목차 |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방법
4.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5. 결론 및 과제

| 초록 |

여성친화도시는 기존의 행정 중심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지역 여성을 비롯한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과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들은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도 저조하며 활동내용면에서도 주로 지역 전반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순 자원봉사 활동, 민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시민참여단이 기존의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재편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활발한 논의 기구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향후 부산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젠더 거버넌스로 주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참여단이 함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시민참여단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민참여단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simjee2@hanmail.net

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정책의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참여단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젠더 거버넌스, 성인지, 참여

1. 문제제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성가족부(2010)는 지역정책의 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여성의 일상적 요구를 반영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여성친화도시를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부서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정책 전반이 성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5).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이 여타의 정책 추진방식과 다른 중요한 차이는 관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 여성을 비롯한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과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이행 점검 과정에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활동 실적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여성친화도시들은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

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혹은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시민참여단은 여성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평등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민참여단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각자 평소 가지고 있었던 지역의 공간과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을 전개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지자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젠더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역시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고 다양한 여성들로 이루어진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도 저조하며 활동내용면에서도 주로 지역 전반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순 자원봉사 활동, 민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산지역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활동이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부산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상호작용으로서 젠더 거버넌스의 의미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실현하고 있는가,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활동이 거버넌스 주체로서 기능하기에 적절한가? 시민참여단이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담는 차별화된 젠더 거버넌스 구조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1) 성주류화와 젠더 거버넌스

한국사회에서 성 주류화는 1995년 UN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가 행동강령으로 채택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성

주류화를 위한 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제도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

성 주류화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공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여 성 중립적 정책을 성인지적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김경희·나성은(2017)에 따르면, 성 주류화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기획·실행되는 성 특정적 정책으로는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남성중심 사회에서 뿌리 깊게 유지되어 온 젠더 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전략으로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된 형태라고 보았다.

정인경(2012)에 따르면 성 주류화는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젠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법적·제도적 장벽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배분되는 자원에 집중하며 주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평등 접근과는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성 주류화는 여성에게 명시적으로 차별적일 것이라고 기대된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책, 제도 전반에 적용되면서 전반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Verloo, 2001)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의 각종 조직들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버넌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성 주류화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민관협력에 기반한 젠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젠더 거버넌스는 어떤 개념인가? 젠더 거버넌스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를 개념화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장영민 외(2006)는 기존의 민주적 거버넌스 개념에 성 분석틀로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정부 중심의 성평등 정책의 한계를 넘어 제도와 정책에 대한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원숙연·박진경(2006)은 젠더 거버넌스를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 관계를 완화·개선

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네트워크 내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과 관계구조라고 보았다. 원숙원(2011)은 이러한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작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하는 유기적이고 변증법적인 상호 작용이라고 보았다. 김재민(2016)은 젠더 거버넌스가 사회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성평등을 추구하고 국가와 시민사회가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체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김재민(2016)은 젠더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소외된 집단의 균등한 참여, 수평적 네트워크, 협상과 소통에 따른 합의, 자율적이 자발적인 운영과 비공식 네트워크의 구성, 젠더 관점이 반영된 효율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들고 있다.

2) 젠더 거버넌스와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젠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젠더 거버넌스의 의미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여성 활동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며 정책결정에서 실질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있다(주혜진, 2013).

젠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동안 주류 정책 영역 밖으로 밀려나 있던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 안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Walby, 2000). 다시 말해 젠더 거버넌스는 행정 관료와 전문가의 의사결정을 통해 추진되어 온 정책 영역에서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의 정책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젠더 거버넌스가 작동한다는 것은 젠더 이슈의 해결을 공동의 과업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협업의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전문가뿐만 아니

라 여성·시민단체, 시민사회 구성원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젠더 거버넌스를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의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시민참여단이라는 추진 기구를 제시하였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는 관련 부서 및 기관, 전문가, 기업, 시의회, NGO 등 지역 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력체로 사업을 기획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단위이다. 시민참여단은 지역 여성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주체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추진 기구의 제안과 더불어 젠더 거버넌스라는 내용적 측면에서 참여 또한 강조하였다. 여성친화도시는 기존의 도시가 경제활동을 주로 하던 남성 위주로 공간 및 시설이 배치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눈으로 공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최유진 외, 2013). 이는 여성의 관심을 고려하고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욕구와 이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정책의 시작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사회적 영역을 창출해냄으로써 여성 다수의 참여를 넘어 기존의 아젠다나 이슈를 만들어왔던 틀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행점검 및 종합성과평가에서 이를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정신청서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의 활동 지원 근거와 지원 실적, 활동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거버넌스 추진 기반에 대한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민관협력 방식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역사회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행점검 지표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구성의 다

양성, 활동 실적, 시민참여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대표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성과보고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 이행점검 지표와 연계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및 다양성, 운영방법, 주요 활동 실적, 대표 사례 등을 평가하고 있다.

〈표 1〉 여성친화도시 지표에 나타난 젠더 거버넌스 체계

영역	지정신청서	이행점검	종합성과보고서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3-1. 양성평등(여성) 정책 추진 관련 위원회 활동 실적 3-2. 양성평등(여성) 정책 추진 관련 민관 협력 체계 - 협의체 구성 여부, 주요 활동 목표, 운영 방안 등	④ 참여/협력 기제(여성 친화도시조성협의체) 1. 구성의 다양성 2. 활동실적	I-1. 다.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① 모집방법 및 구성 다양성 ②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운영방법 I-2.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민관협력체) 운영 실적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민관협력체) 주요 활동 실적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민관협력체)의 기관, 단체 등의 활동 대표사례
시민 참여단	3-2. 양성평등(여성) 정책 추진 관련 민관 협력 체계 - 서포터즈 (시민참여단) 활동지원 근거, 지원실적, 활동 현황 등	④ 참여/협력 기제(여성 친화도시시민참여단) 1. 구성의 다양성 2. 활동실적 3. 주무부서 또는 사업 부서가 시민참여단과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실적	I-1. 나. 시민참여단 ① 시민참여단 구성 I-2. 나. 시민참여단 운영 실적 ① 시민참여단 주요 활동 실적 ② 여성 역량 증진 대표사례

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 이행점검보고서, 종합성과보고서의 지표를 재 구성함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활동이 젠더 거버넌스의 주요한 주체로 지역의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있다. 이를 위해 젠더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참여단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김재민(2016)의 젠더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하였다. 김재민(2016)은 좋은 젠더 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젠더 거버넌스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젠더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소외된 집단의 균등한 참여, 수평적 네트워크, 협상과 소통에 따른 합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운영과 비공식 네트워크의 구성, 젠더 관점이 반영된 효율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참여 방식과 구성, 이슈를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작동,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작용, 자율적 운영 여부, 정책 결정과정을 구성요소로 하여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전반을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인 시민참여단을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김재민(2016)의 젠더 거버넌스 구성 요소를 재구성하였다. 먼저, 시민참여단의 제도적 기반과 기초지자체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초지자체와 시민참여단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시민참여단의 참여 방식 및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참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시민참여단의 주요 활동내용과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살펴봄으로써 시민참여단이 정책결정 및 수립 과정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참여단이 보다 다양한 여성 및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김혜정·신희영(2017)의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사용한 부산시의 11개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와 이행점검표, 성과보고서 등을 재분석하고 11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58명에 대한 설문조사¹⁾와 주무부서 공무원 및 시민참여단에 대한 FGI²⁾ 결과를 재분석하였다.

4.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 제도적 기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도 하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조항을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규정은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또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에 포함되어 있다. 시민참여단 역할을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구는 중구, 남구, 북구, 사하구이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구는 금정구와 수영구이다. 시민참여단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구성 및 운영, 기능, 역할,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상구, 연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구는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와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있으나 시민참여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
- 1)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11개구(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의 시민참여단 328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함.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5월 12일에서 6월 9일까지 약 1달간이며,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158부임
 - 2)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담당자 9명, 시민참여단 10명을 대상으로 세차례 FGI를 실시함

이처럼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단의 운영 및 역할 등을 관련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젠더 거버넌스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표 2〉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관련 조례

지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 (활동지원)	-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 제21조 (구성 및 운영)	-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 제31조 (기능)	-
금정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운영 제20조(구성 및 운영)	-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설치 등)

주: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시민참여단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2) 지자체와의 상호작용

지역 정책에서 젠더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기초지자체와 거버넌스 주체와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있다. 기초지자체와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로서 시민참여단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민참

여단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와 시민참여단과의 관계는 수평적인가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산진구를 제외한 9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상구와 연제구, 사하구가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구가 격월로, 남구와 북구, 금정구가 분기별 1회, 수영구가 반기별 1회, 영도구가 연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회의 빈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형식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 모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상구의 경우 정기회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월별 활동 계획을 논의하지만 이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로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공유,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사상구와 연제구, 사하구의 경우 시민참여단과 지자체가 함께 주체가 되어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지역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시민참여단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J구 담당자는 주무부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A구 담당자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외 다른 업무로 인해 시민참여단 모임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고 그 결과 현재 시민참여단 모임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 시민참여단이 주무부서 담당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상구와 사하구의 경우 시민참여단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담당자가 이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저희 구는 2016년 하반기 이후로 사실 시민참여단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지도 몇 달 되지 않았고 워낙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시민참여단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른 업무가 많아 시민참여단을 챙길 여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J구 담당자).

시민참여단이 자발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보니 제가 회의도 개최하고 역 할도 주고 해야 하는데 사실 여성친화도시 업무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상구나 사하구처럼 여성친화도 시 전담인력이 없는 지역은 실제로 시민참여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A구 담당자).

〈표 3〉 정기회의

구·군	개최횟수	소집주체	회의내용
사상구	월 1회	시민참여단, 지자체	- 이달의 활동계획 토의 등
연제구	월 1회	시민참여단, 지자체	-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처리결과 공유, 토론, 교육 등
남구	분기별 1회	지자체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건의, 토론, -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지역 현장방문, 역량강화 교육 등
영도구	연 1회	지자체	- 사업 추진성과 보고 및 사업 발굴
북구	분기별 1회	지자체	- 정책제안, 모니터링, 홍보
금정구	분기별 1회	지자체	- 선진지 견학,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사하구	월 1회	시민참여단, 지자체	- 지역사회 모니터링 건의 및 논의, 특강 및 체험 참여 등
수영구	반기별 1회	지자체	- 여성친화적 개선요소 및 생활공감 시책 발굴 등
동구	격월	지자체	- 생활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당면사항 논의

주: 부산지역 11개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함

기초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회의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역은 사상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하구이다.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은 남구와 금정구이다. 그 외 보상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기도 한다.

〈표 4〉 시민참여단 보상 제도

구·군	보상관련 조항	보상제도
사상구	-	- 자원봉사시간 인정 - 활동보상(1회 2만원)
연제구	-	- 회의비 지급(1회 1만원)
남구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 제22조(활동지원) 제23조(유공자 표창)	- 식사 제공(부정기적)
금정구	-	- 자원봉사 시간 인정 - 식사 제공(부정기적)
부산진구	-	- 교통비 및 회의비 지급 (1달 1만원)
사하구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운영 제21조(활동지원) 제22조(유공자 표창)	- 월례회 참석시 교통비 지원(1회 1만원)

주: 부산지역 11개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함

이 같은 보상이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젠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한편, 행정기관과 시민참여단과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을 저해하고 자율적인 운영에 근거한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주도의 시민참여단 운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시민의 참여는 지역 정책의 성평등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젠더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와 시민참여단과의 상호작용은 그 방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민관협력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초지자체에서 시민참여단 회의를 소집하고 시민참여단은 소집된 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이 그러하다. 무엇보다 시민참여단의 운영과 내용 역시 기초지자체가 주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의 이해나 욕구가 반영되어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개선이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젠더 거버넌

스의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 행정기관은 시민참여단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정당화 시켜주는 기제로 활용하고 시민참여단 역시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는 공적 활동 또는 자원봉사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3) 시민참여단의 참여 방식 및 구성

2017년 기준 부산지역 11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총 328명으로 평균적으로 29.8명에 달한다. 동구가 52명으로 가장 많고, 북구, 금정구, 연제구, 남구가 3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참여가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는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초기 시민참여단의 모집과 선발을 비롯한 운영은 주로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정책 참여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시민참여단 구성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 모집은 대체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원자들이 많지 않아 기초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관변 성향의 여성단체 구성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F구의 경우 시민참여단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여성단체협의회³⁾가 시민참여단을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단이 별도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성단체협의회가 하고 있던 여성화합 한마당, 바자회, 김장나누기 행사 등의 자원봉사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3) F구 여성단체협의회는 새마을부녀회, 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 참사랑봉사단, 실버사랑봉사대 등 21개 단체, 6,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관변 성향의 여성단체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 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었어요. 지정을 신청하려면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어야 했고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여성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어요(H구 담당자).

2015년 시민참여단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어요. 어쨌거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야 하니까 구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A구 담당자).

저희 구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시민참여단이에요. 여성단체협의회 밴드가 있는데 그 안에서 다문화사업도 하고 멘토링도 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 협의회와 여성친화도시 따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방식이에요(F구 시민참여단).

실제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기존의 여성단체 활동 과정에서 함께 함’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참여함’ 27.8%, ‘지역의 정책과 일상의 공간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직접 가입하여 활동함’ 10.8%, ‘구청 담당자의 권유로 참여함’ 6.3%, ‘기존의 마을 소모임, 공동체 활동을 보다 확대하고자 참여함’ 5.7%, ‘기타’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여성단체 활동 과정에서 주무부서 공무원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지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직접 가입한 경우는 10.8%에 불과하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328명 중 50대가 13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93명, 60대가 79명, 30대가 26명 순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성친화도시 지정 초기에는 일반 여성들의 모집이 쉽지 않다보니 지자체와 교류한 경험이 있는 기존의 관련 성향의 여성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고 따라서 연령대도 높은 편이다. 중구와 영도구, 북구, 금정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초기 여성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시민참여단 구성원들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단체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따라서 60세 이상의 고연령층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5〉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 계기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의 정책과 일상의 공간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직접 가입하여 활동함	17	10.8
기존의 여성단체 활동 과정에서 함께 함	75	47.5
기존의 마을 소모임, 공동체 활동을 보다 확대하고자 참여함	9	5.7
구청 담당자의 권유로 참여함	10	6.3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참여함	44	27.8
기타	3	1.9
합계	158	100.0

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 시민참여단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되면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단체의 비중도 줄어들고 연령대도 다양해지게 되었다. 특히, 사상구와 사하구의 경우 시민참여단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로 재구성하면서 실질적인 시민참여단의 활동력을 담보하는 노력을 하였다.

저희는 제지정을 받으면서 시민참여단 2기를 새롭게 구성했어요. 1기 활동을 해보니 인원이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활동 가능한 분들만 남게 되고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이끌어가게 되더라고요.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모집 때에도 단체의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제외했어요. 2기는 보다 젊은 연령대로 모집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예요(K구 시민참여단).

초기에 공고나 추천으로 40명 가까이 모집되었었는데, 단체소속은 아니고

보통 주부들인데 하고 싶어서 온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활동이 잘 안 되더라구요. 결국 활동하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 현재는 정말 의지가 있는 15명 정도만 남아 있어요(G구 담당자).

〈표 6〉 시민참여단 연령별 구성 현황(2017)

구·군	명칭	인원수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상구	여성친화일꾼	27	0	5	13	9	0
연제구	서포터즈 '연제랑'	39	-	-	5	19	15
중구	주민 서포터즈단	28	-	6	1	9	12
남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34	-	2	15	12	5
영도구	영심이 서포터즈단	19	-	7	9	3	-
북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40	0	0	12	22	6
금정구	여신여친 서포터즈단	38	-	-	7	13	18
부산진구	주민참여단	21	-	3	7	11	-
사하구	주민참여단 '드림우먼'	15	-	-	3	8	4
수영구	봄봄봄 서포터즈단	15	-	-	5	5	5
동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52	0	3	16	19	14
전체		328	0	26	93	130	79

주: 부산지역 11개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함

전반적으로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원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며 특히, 50~60대의 중장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을 가진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구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초지자체 중심의 모집과 구성은 시민참여단이 정책 참여의 주체로서 기능하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변 여성단체 중심의 시민참여단 구성은 지자체로부터 행정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인력을 동원하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민참여단의 구성은 여성친화도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젠더 거버넌스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시민참여단이 젠더 거버넌스의 영향력 있는 행위자가 되기도 어렵게 한다.

결과적으로, 시민참여단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의 기초지자체를 제외하면 부산지역 대부분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젠더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이지만 실제 참여방식과 구성에서는 젠더 거버넌스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기초지자체의 주도하에 거버넌스의 형식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활동 내용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선정 지침에서도 ‘여성의 능동적 참여 보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201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자체 배포자료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목적으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해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의 모집이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하기 보다는 주무부서 주도하에 구성되다 보니 시민참여단의 활동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참여단의 인식조사 결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이며 ‘알고 있다’ 60.1%(매우 잘 알고 있다 7.6% + 잘 알고 있다 52.5%), ‘보통이다’ 34.8%, ‘알고 있지 못하다’ 5.1%(잘 알고 있지 못하다 5.1% +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0.0%)로 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서 본인의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역시 평균 3.6이며, ‘적극적이다’ 58.9%(매우 적극적이다 11.4% + 적극적이다 47.5%), ‘보통이다’ 31.0%, ‘적극적이지 않다’ 10.1%(적극적이지 않다 10.1% +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0.0%)로 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60.1%,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 58.9%가 통계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입을 고려할 때 60% 정도의 인지도와 활동성은 결코 높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심지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는 비율이 5.1%, 활동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10.1%에 달한다는 것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인지도나 활동성이 높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H구 시민참여단에 따르면 시민참여단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이해하기 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의 연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D구 시민참여단의 경우 ‘성평등’, ‘여성친화’라는 용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주민들이 더 잘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희 구 시민참여단들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친화에 대해 이해하기보다 자원봉사 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 차례 교육도 받고 같이 모니터링도 나가보고 했는데 다들 나이도 많으시고 힘들어 하세요(H구 시민참여단).

저희 구는 남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성평등이나 여성친화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 하세요. 그 남성분이 그 말씀 하실 때 사실 다른 여성분들도 공감했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고 너무 어렵고 그런거죠. 지금은 그냥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D구 시민참여단).

〈표 7〉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0	0.0
알고 있지 못하다	8	5.1
보통이다	55	34.8
잘 알고 있다	83	52.5
매우 잘 알고 있다	12	7.6
합계	158	100.0
평점(5점 만점)	3.63	

〈표 8〉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한 자기평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0	0.0
적극적이지 않다	16	10.1
보통이다	49	31.0
적극적이다	75	47.5
매우 적극적이다	18	11.4
합계	158	100.0
평점(5점 만점)	3.60	

이처럼 부산지역 시민참여단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자체적인 사업 운영과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표 10>과 같이 대부분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들은 대체로 지역 전반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제안하여 개선하는 방식의 모니터링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사상구는 버스 승강장, 옹벽 개선 사업,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 등 기존의 사업 추진에 따라 사전 현장 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제구와 중구, 남구, 금정구, 사하구, 수영구, 동구의 경우 지역사회 내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지역 전반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제안하여 개선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들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서 시민 참여단의 가장 주된 역할에 대해 '지역 정책 및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4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 여성의 일상적 요구를 행정에 건의하는 가교 역할' 20.9%, '구청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역할' 17.1%, '정책에 대한 주민의 개선의견 수렴 및 성평등사업 발굴' 11.4%, '여성정책 부서 및 타부서의 공모사업, 민관협력사업 추진' 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참여단 스스로도 시민참여단의 주된 역할을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평등한 사업을 제안하고 발굴하는 것에 두기보다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표 9> 시민참여단의 주된 역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지역 정책 및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73	46.2
지역 여성의 일상적 요구를 행정에 건의하는 가교 역할	33	20.9
정책에 대한 주민의 개선의견 수렴 및 성평등사업 발굴	18	11.4
구청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역할	27	17.1
여성정책 부서 및 타부서의 공모사업, 민관협력사업 추진	7	4.4
합계	158	100.0

여성친화도시는 기존의 도시가 경제활동을 주로 하던 남성 위주로 공간 및 시설이 배치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의 눈으로 공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최유진 외, 2013). 따라서 이 같은 지역사회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은 여성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점에서, 도시 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신체적 차이와 안전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보니 여성친화도시 초기 단계에서 모니터링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은 이러한 시설 인프라 관련 모니터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젠더 거버넌스의 내용적 측면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참여단의 활동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나마 시민참여단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사상구와 사하구가 대표적이다. 사상구는 우먼라이브러리 개소와 함께 공간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양성평등도서 작가와의 대화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소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성촌 푸르미맘 마을 공동 돌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아동성폭력 인형극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 희망기업 선정 시 시민참여단이 업체를 방문하여 사전 조사를 하고 '사상구 지역 여성 100인 원탁토론' 시에는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사업에 시민참여단이 결합하여 사업을 보다 여성친화적으로 재편하기도 하였다.

사하구 역시 시민참여단들이 구연동화 교육을 자체적으로 받고 아동성폭력 예방 구연동화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의 경우 여성가족과, 도시안전과, 시민참여단이 지역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동아대 하단캠퍼스 유흥가 상업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현

장답사 결과를 토대로 원룸의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원룸 출입문 정면에 거울시트를 부착하여 원룸 출입 시 외부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룸촌을 중심으로 사각지대에 반사경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향후 원룸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 시 권고사항으로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7년 부산광역시 지원 받아 지역을 보다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이처럼 사상구와 사하구의 사례는 시민참여단이 여성친화도시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존사업을 여성친화적 관점으로 재편하는, 젠더 거버넌스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들이 시도하고 있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발굴 사업의 경우 기존의 사업에 시민참여단이 단순히 결합된 방식에 불과하다. 특히, 대중교통 임신부석 착석 알리미 설치 사업의 경우 시민 공모사업으로 시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업이기는 하나 시민의 의식 변화를 통해 임신부에 대한 배려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임신부를 분리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핑크색 여성 배려 주차장, 부산시 지하철의 여성 배려칸⁴⁾과 같은 사업과 마찬가지로 연대와 소통이 아니라 성별 분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자율성과 내용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기존 사업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참여하기만 하는 방식이 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해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4) 부산지하철 여성 전용칸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범운영 되었다. 여성배려칸은 승객이 몰리는 시간(매일 오전 7~9시, 오후 6~8시까지)에 임신부를 배려하고 성추행 등 범죄에서 여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남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성배려칸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 10〉 시민참여단 사업운영 내용

구·군	사업운영 내용
사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먼 라이브러리 운영 - 신나는 사상, 여성인재 양성 프로젝트 중 우먼라이브러리 양성평등도서 작가와의 대화(5회) 추진(여성가족부 공모사업) - 우성촌 푸르미맘 마을 공동 돌봄 사업(여성가족부 공모사업) - 아동성폭력 인형극 (인형극단 “꾼” 운영) - 여성친화 희망기업 사전 조사 참여 - 타 여성친화도시 사상구 견학 시 활동사례 직접 발표 - 지역 여성 100인 원탁 토론 시 퍼실리테이터 활동 - 약수터 공원 내 화장실 안심벨 설치 및 관리 - 버스 승강장 및 승강장 내 조명 시설 설치 대상지 조사 - 삼덕로 주변 옹벽개선 사업 현장 모니터링 -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지 현장조사, 주민 인터뷰
연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단을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아동안전지도 제작과정 참여 - 밴드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 실시 - 보행불편사항, 개선사항 등 발굴, 개선 방안 모색 - 타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사례 견학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화도시사업 및 여성정책 모니터링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모니터링 - 지역의 안전취약지역 순찰, 여성친화적 개선 건의
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임산부석 착석 알리미 설치 - 남구 홈페이지 내 서포터즈 모니터링 게시판 개설 - 모니터링 활동결과와 사업 제안 게시
영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추진(태양센서등 설치) - 채용박람회 여성취업상담 운영 - 찾아가는 아동 성교육 추진 - 화장실 안심비상벨 작동여부(대교파출소 협력), 표지판 훼손, 분실 등 발생사항 보고 및 조치
금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장과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사업'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발굴 - 지역사회 내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
사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안전지도 제작 참여 - 아동성폭력 구연동화(구연동화 봉사단 활동 준비 중) - 여성친화도시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 제작, 밴드 활동 - 지역사회 내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 - 여성친화도시 선진지 견학
수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 현장 방문 - 지역사회 내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참여 - 밤길 안전을 위한 쏠라 표지병 설치 대상지 조사 - 지역사회 내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

주: 부산지역 11개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함

여성친화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젠더 관계의 평등한 변화, 성평등 가치의 확산이다. 따라서 젠더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단순히 여성의 경험이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여성과 남성 간 존재하는 차별적이고 권력적인 관계를 가시화하고 정책 참여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은 정책의 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여성들이 참여한다는 형식적인 문제에는 접근하고 있으나 성평등의 확산이라는 정책의 내용적 접근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5) 정책결정과정 참여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는 지역 여성들이 도시 운영 주체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여성의 임파워링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사업의 수립과 집행을 제안하여 정책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참여단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는 미진한 수준이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사상구, 연제구, 금정구, 사하구에 불과하다. 특히, 사상구는 9명으로 가장 많고 여성아동지역연대, 축제 추진 위원회, 자치분권 위원회, 주민감사관, 기금심의 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금정구의 경우 5개 분과로 이루어진 시민참여단 분과장이 모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로의 참여가 아쉽다. 사하구는 2명이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제구는 1명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4개구를 제외한 7개 지역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정책결정과정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표 12〉 시민참여단 정책결정과정 참여 현황

지역	참여 인원	참여 내용
사상구	9명	- 사상구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위원(1명) - 축제 추진 위원회(1명) - 자치분권 위원회 위원(1명) - 주민감사관(5명) - 기금심의 위원회 위원(1명)
연제구	1명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1명)
금정구	5명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5명)
사하구	2명	-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위원(2명)

주: 부산지역 11개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함

이처럼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여성의 요구나 필요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시민참여단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는 지역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고 젠더이슈에 기반한 정책 추진과 사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기초자치체 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따라서 시민참여단의 참여 자체가 곧 행정과 정책에서의 성 주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참여단이 그냥 봉사단체가 아닌 각 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결재권자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구는 단체장이 여성이기도 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보니 모든 정책에 시민참여단이 위원회의 구민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요(K구 담당자).

시민참여단은 상대적으로 행정과 전문가들에 비해 정책 지식과 경험과 부족하다 보니 거버넌스를 통해 기존의 제도나 사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금정구의 경우 5명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모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 속해 있다. 시민참여

단 활동이 적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다보니 개인의 민원성 발언이 중심이 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는 단순히 개인의 민원성 발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젠더화된 선택에 동의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저희 구의 경우 시민참여단이 5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분과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위원으로 각 분과장을 위촉했어요. 그런데 분과 활동도 미약하고 각기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회의와 전혀 관련 없는 민원성 발언도 많이 하고 사실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H구 담당자).

따라서 기존의 정책에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참여단의 위원회 참여가 개인의 참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원회 참여 내용을 시민참여단들과 함께 공유하고 시민참여단 내부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모임을 만들어 좀 더 전문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의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6)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여성친화도시가 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요구인 만큼 시민참여단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여성들을 조직하여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통해 지역 사업 파트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최유진 외, 2015).

지역 내에는 여성가족 시설·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

터, 여성단체, 마을조직, 지역 시설·기관, 복지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사회적 경제,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등 상당수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도시 구성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 직업을 가진 시민들로 이루어진 이 같은 그룹들은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발전방안을 만들 수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지역 내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K구 시민참여단의 말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부터 참여해 일상을 바꾸는 활동이 필요하다.

일단 우리가 큰 정치한다 생각 말고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동 대표라도 우리가 나서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지원하면서 죽어있는 공간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꾸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애들도 공부하고 놀 수 있는 층간소음 없는 장소를 만드니까 젊은 엄마들이 모여더라고요. 우선 자기가 살고 있는 작은 동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K구 시민참여단).

사하구는 지역사회 내 모임인 맘카페와 연계하여 다대포 해변공원 내 유모차 대여 사업과 프리마켓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맘카페 회원 중 일부가 시민참여단으로 결합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지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하맘카페'와 시민참여단이 협약식은 아직 안했지만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알뜰장터 행사를 할 때, 시민참여단들이 애들을 봐주는 등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대포 해변에서 유모차대여 사업을 하는걸 보시더니 좋은 것 같다고 알뜰장터 수입이 나면 저희 과에 유모차를 기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서로 돕기도 하고 그 분들 중 일부는 시민참여단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요(G구 담당자).

이처럼 일상적 네트워크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의 이슈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 의제를 발굴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다양한 그룹의 구성원들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 그룹과의 연계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와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과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을 비롯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 추진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의 기반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부산지역 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젠더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지역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과 수행 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젠더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인 시민참여단이 과연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부산지역 시민참여단에 대한 분석 결과 시민참여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고 모든 지역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기초지자체가 중심으로 되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민참여단의 구성원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시민참여단의 역할이나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인식 또한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재편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활발한 논의 기구로 작동하기 보다는 무엇

을 논의하고 무엇을 해결해가야 하는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단순히 주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주도적인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상구나 사하구의 사례처럼 시민참여단이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것이 가능할 때 여성친화도시의 주요한 의미인 젠더 거버넌스로 기능하고 이것이 지역 정책의 성주류화를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상구나 사하구는 어떤 부분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 사상구나 사하구 역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초기 시민참여단 활동을 주도하였다. 시민참여단 구성이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조성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다보니 주민의 정책 참여에 의미를 두기보다 시민참여단 구성 그 자체가 중요했다. 따라서 초기 기초지자체 중심의 구성과 운영은 모든 지역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한계로 보인다. 다만, 사상구와 사하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인력을 두고 있고 따라서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부여하고 활동을 견인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시민참여단 역시 지자체의 개입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사상구의 경우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지역에서 마을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면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모임을 꾸려나가는 경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참여단들이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내고 인형극이나 구연동화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참여단 활동을 통한 성취감을 가지고 모임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상구와 사하구를 제외한 부산지역 시민참여단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민참여단 활동에 매우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지자체와 시민참여단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회의나 교육을 소집하면 수동적으로 참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초지자체 담당자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 시민참여단의 활동과 내용이 달라지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젠더 거버넌스로 주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참여단이 함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는 시민참여단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현재 시민참여단의 구성이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전제한다면 시민참여단들이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성인지적 정책 참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시민참여단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상구의 사례처럼 시민참여단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시민참여단들이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변화를 체감한 경험은 향후 시민참여단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참여단 스스로도 변화와 노력도 필요하다. 먼저, 시민참여단이 다양한 계층의 삶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는 시민참여단 초기 구성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의 관변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고 그러다보니 연령의 편중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성원의 편중이 지속된다면 시민참여단의 활동력이 감소하고 기능이나 역할도 정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활동 가능한 구성원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규 참여자의 진입을 활성화하여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아카데미, 여성대학 등 교육과정을 통해 모집하거나 지역 내 소모임 또는 마을 운동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그동안 참여 기회를 갖지 못했던 주민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교가 밀집되

어 있는 금정구의 경우 대학생 시민참여단, 공공기관을 둘러싸고 직장인이 많은 연제구의 경우 직장인 시민참여단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민참여단 구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에만 한정된 지역 정책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역 정책을 조망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남성의 참여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민참여단은 젠더 거버넌스의 다른 주체들과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여성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평등 가치와 여성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참여단의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기초적인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식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60.1%에 불과하다. 이는 그간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교육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한 채 1~2시간의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방향과 내용, 지역사회의 특성, 시민참여단의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기획되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시민참여단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민참여단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정책의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참여단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의 경험이 축적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자율성과 성인지적 관점으로 내용성을 가진다면 여성친화도시의 효과적인 조성 and 추진은 물론 지역 정책의 성평등, 성주류화를 견인하는 주요한 젠더 거버넌스의 주체로 기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경희·나성은. 2017. “성주류화 정책에서의 젠더 거버넌스와 여성운동.” 『여성학연구』, 제27권 3호, 149-186쪽.
- 김영희. 2010.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성찰과 전망 : 공간의 정치에서 복지의 공간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3권 1호, 91-121쪽.
- 김재민. 2016. “젠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 『이화젠더법학』, 제8권 2호, 145-191쪽.
- 김혜정·신희영. 2017.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성화방안』.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여성가족부. 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5. 『2015 여성친화도시 사업가이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원숙연. 2011. “젠더-거버넌스? ‘젠더-거버넌스’: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여성학논집』, 제28집 2호, 3-36쪽.
- 원숙연·박진경. 2006.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2권 4호, 86-87쪽.
- 장영민·장명선·한지영. 2006.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장임숙·이원일. 2013.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 : 양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6권 4호, 33-54쪽.
- 정인경. 2012. “젠더주류화와 여성의 시민권.”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4호, 53-72쪽.
- 주혜진. 2013. “성 주류화 하기의 가능성 탐색 : 시민 성별영향분석평가단 활동을 통한 젠더 지식과 입장의 형성.” 『한국여성학』, 29권 4호, 1-40쪽.
- 주혜진. 2016.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입장.” 『페미니즘 연구』, 16권 2호, 133-175쪽.
- 최유진. 2014.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젠더 거버넌스와의 함의.”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59-572쪽.
- 최유진·문희영·장미현. 2013.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유진 외. 2015. 『2015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Verloo, M. 2001. "Another Velvet Revolution? Gender Mainstreaming and the Politics of Implementation." *IWM Working Paper*, No. 5.
- Walby, Sylvia. 2000. "Beyond and Politics of Location : The Power of Argument in a global era." *Feminist Theory*. Vol. 1, issue 2. pp.189-206.
- Walby, Sylvia. 2005. "Gender Mainstreaming : Productive Tensions in Theory and Practic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Vol. 12, Issue 3. pp.321 - 343.
- Walby, Sylvia. 2008. "Gender Mainstreaming in Theory and Practice." A New Global Trend in Gender Mainstreaming and Its Implications for Women's Policies in Korea. KWDI 25th Anniversary International Symposium(2008.04.24.).

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f Citizen Participation
Group in Women-friendly City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governance :
Focus on Citizen Participation Group in Busan

Kim, Hye Jung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Women-friendly citi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are moving away from the existing administration-oriented policies and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groups in policies. Therefor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governance structure for communicating and cooperating with local women and other citizen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creating a women-friendly city. Women-friendly cities in Busan have set up the role of citizen participation groups in the laws and have organized a citizen participation group composed of various women. However, residents are less involved. Activities are mainly at the level of civil complaints because they monitor local inconveniences and present results to the relevant departments. This shows that citizens participation groups does not act as a lively debate mechanism that suggests new project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which can reorganize existing policy into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and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Therefore, in order for citizen participation groups in Busan to play a major role in gender governance, basic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 participation groups should pursue change together.

Key words: Women-friendly city, citizen participation group, gender governance, gender sensitive, participation

- 투 고 일 : 2018년 3월 9일
- 최초심사일 : 2018년 3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4월 19일